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

우110-755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세종로청사 505호 /전화(02)734-5723~3 /전송734-9347~8

문서번호 수개 67400- 144

시행일자 1998. 5. 13. (년)

(경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취급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보존	년	
부단장	국무총리	국무총리
부 장	국무총리	기획심의관
과 장	국무총리	
기안	조 규 담	협조

제 목 :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 수립(국무총리
지시 제 1998- 11 호)

↓ 책자 있음 (~~제1차~~)
(유효재제)

1. 물은 인체 및 생명체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임과 동시에 농업 · 공업은 물론 서비스산업에까지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생산요소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생명활동 유지를 위한 요소로서의 기능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도 물이 없이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2. 따라서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공급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1차적인 책무이며, 먹는물의 안전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이므로 상수원 수질오염을 야기시키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3. 특히, 한강은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이요 수도권 산업의 원동력이 되어왔으나 인구증가, 각종 건축물의 난립, 무분별한 개발, 산업 및 축산활동의 증가등에 따라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이제는 먹는물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팔당호 등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모델링에 의한 수계별·권역별 수질관리, 상수원 오염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상수원 보호제도의 개선,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하천정비, 오염행위자에 대한 지도·단속·처벌의 강화 등 특단의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법령의 제·개정, 제도개선, 소요예산의 확보, 추진체계의 정비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5. 환경부 등 관계부서의 장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팔당호등 상수원의 수질개선 문제가 엄청난 국가적인 부담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효성있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 모든 수질관리정책과 실천계획은 『사실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모델』을 정립할 것.

○ 정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및 민간전문가, 그리고 지원연구기관이 수질관리대책 수립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맑은물은 곧 생명』이라는 가치기준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으로써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할 것.

○ 팔당호등 상수원의 수질관리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결되고 규제지역과 수혜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정책수립이 어려우므로 무엇보다도 『공공성, 전문성 및 과학성』을 중시하여 지역정서나 집단민원 등에 좌우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 특히, 수질오염 원인자는 수질오염예방, 회복 및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수질개선으로 혜택을 입는 수혜자도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등 책임있는 수질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 또한, 맑은물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데에는 정부와 국민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국민 스스로가 물을 아껴쓰고 수질보전을 생활화할 때에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국민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팔당호등 주요 상수원의 수질오염도를 주기적으로 측정·공표하고, 수도권 2000만 전 주민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

○ 이와함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특히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만큼은 그 어떤 행위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엄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앞으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임의 지침에 의거 소관부서별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소관별 대책을 토대로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금년 8월까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추진하므로써 팔당호 수질이 빠른시일내 가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불 임 :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수립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31·34·36·37·40·41·44·46·51), 나(01·04·10·11·12),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어촌진흥공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

우110-755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세종로청사 505호 /전화(02)734-5723~3 /전송734-9347~8

문서번호 수개 67400-74

시행일자 1998. 5. 13. (년)

(경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수	번호	재	
처	리	공	
담	당	람	
자			

제 목 :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 수립(국무총리
지시 제 1998-11)

1. 물은 인체 및 생명체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임과 동시에 농업 · 공업은 물론 서비스산업에까지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생산요소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생명활동 유지를 위한 요소로서의 기능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도 물이 없이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2. 따라서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공급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1차적인 책무이며, 먹는 물의 안전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이므로 상수원 수질오염을 야기시키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3. 특히, 한강은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이요 수도권 산업의 원동력이 되어왔으나 인구증가, 각종 건축물의 난립, 무분별한 개발, 산업 및 축산활동의 증가등에 따라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이제는 먹는물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팔당호 등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모델링에 의한 수계별·권역별 수질관리, 상수원 오염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상수원 보호제도의 개선,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하천정비, 오염행위자에 대한 지도·단속·처벌의 강화 등 특단의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법령의 제·개정, 제도 개선, 소요예산의 확보, 추진체계의 정비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5. 환경부 등 관계부서의 장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팔당호등 상수원의 수질개선 문제가 엄청난 국가적인 부담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효성있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 모든 수질관리정책과 실천계획은 『사실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모델』을 정립할 것.

○ 정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및 민간전문가, 그리고 지원연구기관이 수질관리대책 수립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맑은물은 곧 생명』이라는 가치기준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므로써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할 것.

○ 팔당호등 상수원의 수질관리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결되고 규제지역과 수혜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정책수립이 어려우므로 무엇보다도 『공공성, 전문성 및 과학성』을 중시하여 지역정서나 집단민원, 등에 좌우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 특히, 수질오염 원인자는 수질오염예방, 회복 및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수질개선으로 혜택을 입는 수혜자도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등 책임있는 수질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 또한, 맑은물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데에는 정부와 국민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국민 스스로가 물을 아껴쓰고 수질보전을 생활화할 때에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국민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팔당호등 주요 상수원의 수질오염도를 주기적으로 측정·공표하고, 수도권 2000만 전 주민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

○ 이와함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특히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만큼은 그 어떤 행위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엄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앞으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임의 지침에 의거 소관부서별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소관별 대책을 토대로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금년 8월까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추진하므로써 팔당호 수질이 빠른시일내 가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붙임 :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수립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31·34·36·37·40·41·44·46·51), 나(01·04·10·11·12),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어촌진흥공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팔당호등 漢江水系 上水源
水質管理特別對策 樹立에 關한
國務總理 指示

1998. 5. 13

國 務 調 整 室
水質改善企劃團

목 차

I. 國務總理 指示事項

II. 팔당호등 漢江水系 上水源 水質管理特別對策 樹立

1. 팔당호등 漢江水系 上水源 水質관리대책 수립
및 推進體系的 구축
2. 科學的이고 體系的인 水質모델링에 근거한
汚染 低減방안 강구
3. 上水源 汚染豫防을 위한 保護管理制度의 개선
4. 環境基礎設施의 早期 擴充 및 情報化등 운영
관리의 효율화
5. 河川정비 및 維持用水의 확보방안
6. 水質汚染행위에 대한 指導·團束의 효율화
7. 물 節約과 水質汚染예방을 위한 敎育실시

III. 綜合對策樹立 推進日程

I. 國務總理 指示事項

- 물은 人體 및 生命體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임과 동시에 농업·공업은 물론 서비스 산업에 까지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生産要素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生命活動 維持를 위한 요소로서의 기능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도 물이 없이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國民이 安心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의 공급은 國民의 生存權 보장을 위한 政府와 地方自治團體의 제1차적인 責務이며 먹는물의 安全問題는 國民의 生命을 保護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國家的인 課題이므로 上水源 水質汚染을 惹起시키는 行爲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正當化 될 수 없습니다.
- 특히 한강은 2천만 首都圈 市民의 젖줄이요 首都圈 산업의 原動力이 되어왔으나 人口增加, 각종 建築物의 난립, 無分別한 開發, 産業 및 畜産活動의 증가 등에 따라 水質汚染이 날로 심화되어 이제는 먹는물마저도 威脅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팔당호 등 首都圈 上水源의 水質을 실질적으로 改善하기 위해서는 오염의 根本적인 原因把握과 이에 대한 對策마련이 시급한 바, 科學적이고 體系的인 水質管理모델링에 의한 水系별·圈域別 水質管理, 上水源 汚染의 근원적 豫防을 위한 上水源保護制度의 改善, 環境基礎施設 擴充 및 河川整備, 오염행위자에 대한 指導·團束·處罰의 強化등 특단의 汎政府的인 綜合對策을 마련하고 關聯法令의 制·改定, 制度改善, 所要豫算의 확보, 推進體系的 整備등 政府가 할수 있는 모든 努力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 環境部등 關係部署의 長은 이번 機會를 놓치면 팔당 상수원의 수질개선 문제가 엄청난 國家的인 負擔이 된다는 점을 留念하여, 다음 몇가지 事項등에 重點을 두고 實效性있는 『팔당호등 漢江水系 上水源 水質管理特別對策』을 樹立하기 바랍니다.

○ 모든 水質管理政策과 實踐計劃은 「事實의 原則」에 따라 正確한 環境基礎調查 結果를 토대로 科學적이고 體系的인 「水質管理모델」을 정립할 것.

- 政府, 地方自治團體, 環境團體 및 民間專門家, 그리고 支援研究機關이 수질관리대책 수립과정에 共同으로 參與하여 「맑은물은 곧 生命」이라는 價値基準을 최우선적으로 適用하므로써 具體的이고 實現可能한 對策을 樹立할 것.
- 팔당호등 상수원의 수질관리는 地域住民의 利害와 直結되고 規制地域과 受惠地域이 다른 경우가 많아 合理的인 政策樹立이 어려우므로 무엇보다도 「公共性, 專門性 및 科學性」을 중시하여 地域情緒나 集團民願 등에 좌우되지 않는 政策을 樹立하도록 할 것.
- 특히, 水質汚染 原因者는 水質汚染豫防, 회복 및 被害救濟비용을 負擔하여야 하고, 수질개선으로 혜택을 입는 受惠者도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費用을 分擔토록하는 등 責任있는 수질관리대책이 樹立되도록 할 것.
- 또한, 맑은물과 깨끗한 環境을 지키는 데에는 政府와 國民이 따로 있을수 없으며, 國民 스스로가 물을 아껴쓰고 水質保全을 生活化할 때에만

安心하고 마실수 있는 물이 國民들에게 되돌아 온다는 認識을 強化하기 위해 팔당호등 주요 상수원의 水質汚染度를 週期的으로 測定・公表하고, 首都圈 2,000만 전 住民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敎育과 弘報를 積極 推進해 나갈 것.

- 이와 함께 自然을 毀損하는 행위, 특히 水資源을 汚染시키는 行爲만큼은 그 어떤 行爲보다 強力한 指導・團束을 실시하여 엄단하는 등 綜合的인 對策을 講究할 것.
- 앞으로, 각 部處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불임의 指針에 의거 所管部署별 對策을 講究하고, 環境 部長官은 所管別 대책을 토대로 『팔당호등 漢江水系 上水源 水質管理特別對策』을 早速히 마련하여, 금년 8월까지 『물管理政策調整委員會』에서 確定, 推進하므로써 팔당호 水質이 빠른 시일내 可視的으로 改善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할 것

불임 : 팔당호등 漢江水系 上水源 水質管理特別
對策 樹立指針 1부. 끝.

II. 팔당호등 漢江水系 上水源 水質管理特別對策 樹立 指針

- ☐ 必要性 : 팔당호등 漢江水系 上水源 地域의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활동의 확대로 汚染源이 크게 增加되고 水質이 惡化일로에 있어 2,000만 首都圈 시민의 生活用水 公 급에 커다란 威脅이 되므로 科學的이고 體系的인 「팔당호등 漢江水系 上水源 水質管理特別對策」을 樹立·推進코자 함.
- ☐ 對象地域 : 팔당호등 漢江水系 上水源 5大圈域 (별첨)
- ☐ 水質目標 : 오는 2005년까지 한강수계 5大 圈域의 水質을 1級水로 改善
- ☐ 樹立基準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시행중인 漢江水系環境基礎調查(98.5월 完了예정) 結果와 監査院 감사결과 處分要求및 勸告·通報(감사원 사일 16330-44호, '98.4.11)내용을 對策樹立의 基礎資料로 活用하고, 다음의 指針에 留念하여 特단의 對策을 마련토록 함.

1. 팔당호등 漢江水系 上水源 水質管理特別對策 樹立 및 推進體系의 構築

□ 계획수립 對策班 設置運營 : 환경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관으로 구성

○ 구성 : 환경부 수질보전국장(반장),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장, 농림부 시설관리과장,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장, 산업자원부 수화력발전과장, 법무
부 검찰2과 담당검사, 교육부 및 예산청 담당과장,
해당 광역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도) 환경담당국장

○ 관계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지침에
의거 소관별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는 소관별대책
을 종합조정하여 『팔당호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
관리특별대책』을 수립

- '98. 5-6월중 현지조사, 정책개발, 종합대책수립

- 계획수립 과정에서 해당권역별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조정이 안되는 사항은 소관부처
별 입장과 환경부 검토의견을 함께 제시

□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제도적근거 별도 마련)

○ 구성 :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또는 한강환경관리청
장(주관), 해당 광역지자체 환경담당국장

○ 주요기능

① 한강수계 물관리정책 사전심의

② 상수원과 관련된 5대권역 개발 및 건축시설
인·허가계획 사전협의

- ③ 상·하류간, 지역간 물분쟁 조정
- ④ 물값조정 및 비용부담방안 강구
- ⑤ 기타 현안문제 협의·조정

□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관리협의체』 (지자체조합) 운용

- 구성 : 5대권역별(북한강, 남한강, 팔당호, 팔당하류~잠실수중보, 임진강~한탄강) 해당지자체 시장·군수(의장은 호선원칙)
- 주요기능 예시
 - ① 권역별 수질관리대책을 수립·추진
 - ② 환경기초시설 공동투자 및 시설운영 관리
 - ③ 환경시설 운용관리비용 부담방안 강구(예 : 지자체별 오염량 기준)
 - ④ 기타 현안을 협의·조정

□ 지방자치단체별로 『물관리대책반』 운용(반장 : 부시장, 부군수)

- 구성 : 시·군별 상·하수도, 건설, 환경담당과장, 환경관련단체 및 전문가등
- 주요기능
 - ① 상하수도 확충, 수질개선등 물관리대책 추진
 - ②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인·허가 협의
 - ③ 기타 수질개선사업 수립·추진
 - ④ 물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질관리, 수자원 확보관련 업무 추진체계의 정비

2. 科學的이고 體系的인 水質모델링에 근거한 汚染低減방안 講究

- 한강유역 및 수계별(5대권역별·지천별·배수구역별)수질 관리모델 수립(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지자체)
 - 한강유역내 권역별로 모든 오염원별 오염물질발생량, 수계유입량, 자체정화 및 유달량 등 수질관련 정보와 강우량, 하천유량, 댐유입량, 저수량, 방류량 등 수량정보의 조사분석
 - 과학적인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상수원보호관리 제도개선, 하천유지용수확보, 배수구역별 오염총량 설정·관리, 비점오염원관리등 권역별로 과학적인 수질관리 대책 수립·추진
 - 국립환경연구원과 해당 시·도의 환경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
- 공동조사반 구성·운용(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결과 검토 및 과학적 기초조사 실시를 위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등 수질·수량분야 전문가 10인내외로 구성
 - '98년 5~6월중 현지조사, 팔당호 수질개선대책 및 권역별 수질관리모델 수립을 적극지원

3. 上水源 汚染豫防을 위한 保護管理 制度의 改善

□ 상수원보호제도의 전면 재검토

-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그린벨트지역등 상수원구역관리와 관련한 각종 제도를 재검토하여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통합 조정하고 투명화하는 방안 강구(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은 상수원보호원칙과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은 상·하수도 대책이 완비된 경우에만 허용하되, 상수원 영향지역에서의 신규개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지자체)
 - 기허가된 개발계획 또는 건축물 인·허가도 상·하수도시설 완비 및 정상가동시에만 준공 또는 사용허가
- 상수원지역과 관련이 있는 준농림지역의 음식점·숙박시설 등 오염원의 신규입지 금지 및 수계인접 지역의 오염시설 입지규제 강화방안 강구(환경부, 건설교통부)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되, 자치단체가 이를 소홀히 하거나 2개이상의 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이들간의 이해상충 등으로 지정지연시 국가에서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환경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1급수 수질목표 달성을 위해 오염총량 한계치를 설정·관리하고, 방류수 수질 및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지자체)
 - 공공, 민간부문의 추가소요 예산 확보방안 및 규제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보상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비 대폭 확충등 중앙정부 및 수혜자의 지원 강화방안 마련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내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소유 토지의 민간불하 제한 및 환경친화적 이용 증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지자체 및 산하기관 등)
- 상수원지역에 있는 모든 오·폐수배출시설물의 법적 의무이행상황 관리대장(카드) 운용(지자체, 환경부)
-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저감을 위하여 상수원 지역에 축산시설의 신규입지 또는 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환경부, 농림부)
 - 기타지역의 경우 축산육성정책과 축산폐수처리대책을 병행시키는 방안
- 상수원 영향 호소에서 가두리 양식장 신규입지 금지 및 기존 양식장 2000년까지 완전 철거(해양수산부)
- 먹는물의 안전을 위해 상수원 지역에서의 농약·비료 사용제한등 환경친화적인 농법 도입방안 강구 (농림부, 환경부)

4. 環境基礎施設の 早期擴充 및 情報化等 運營管理의 效率化

- ☐ 5대권역의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질소·인처리 포함)을 조기에 확충하여 2002년까지 하수의 실제처리율을 90%이상으로 제고하는 방안(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예산청)

*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사전투자는 오염된 물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후투자보다 훨씬 효과적임.

- ☐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재원조달방안 강구
(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예산청)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국가예산 선투자 및 지방양여금의 수질오염방지사업비 배정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
 - 수도권의 물값을 획기적으로 현실화하여 상·하류 지역주민 공동으로 수질개선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 하수처리장 건설과 병행하여 하수관망 확충을 위한 재원도 적극적으로 확보

-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용 저감,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권역별 공동관리제도,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대행 관리제도의 도입 및 민자유치방안 강구(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신규 오염원 입지를 목적으로 하는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지양하고 우수 및 오수의 분리차집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취락시설이 밀집하여 관거차집에 의한 하수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원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부락별(마을하수도, 대형 합병정화조) 또는 건축물별(합병정화조)로 분뇨 및 생활잡배수를 완전 처리후 자연계로 배출하는 방안(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수질, 수량관련 기초자료를 수계별·권역별로 DB화 하고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처리내역, 지점별 수질, 하천유량, 댐저수량, 상·하수관로 및 취·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에 대한 GIS화 추진(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지자체)

- 한강수계 전체의 실시간 물관리정보센타 및 기술연구 센타 설립방안 강구(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5. 河川整備 및 維持用水의 確保방안

- ☐ 수질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천유량 유지를 위해 한강수계 모든 댐의 다목적화 등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 댐방류 결정도 공급자 중심에서 공급자, 수요자 및 수질관리기관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안 강구
- ☐ 상수원보호와 관련하여 댐주변과 하천부지의 경작을 제한하고, 토사유출 및 오염물질유입 저감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하천관리방안 강구(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 ☐ 팔당호 등 주요호소 및 오염지천의 퇴적물에 의한 수질영향 및 내생산 오염도 등을 분석하고 준설 또는 수생생물 생육을 위한 부도설치 등 수질개선 방안강구(환경부, 건설교통부, 지자체)
- ☐ 팔당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정비, 골재 채취행위 등을 금지하여 자연정화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 소하천 살리기운동의 전개방안(행정자치부, 지자체)
 - 소하천정비시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등 토사, 쓰레기의 하천유입을 억제하는 방안
 - 인공습지 조성, 수생식물 재배등 소하천의 자체 정화기능을 회복시키는 방안
 - 하천복개에 의한 수생태계의 절멸, 콘크리트 고수부지 조성에 의한 하천단면적 축소, 수생물의 서식공간 훼손 등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

6. 水質汚染행위에 대한 指導・團束의 效率化

- ☐ 한강 환경감시대의 기능 확대・개편등 팔당호 관리 기능 효율화(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수계별 환경감시대(한강・경기도・한탄강 감시대등)를 통합 개편하여 상설조직으로 운용
 - 권역별 감시・단속 지도단체의 운용, 감시대간 업무협조, 수시 특별단속 실시
- ☐ 환경부장관 및 환경관리청장에게 행정처분권 부여 방안 강구(환경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고의로 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수를 몰래 버리는 등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한 업체등
- ☐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방안 강구(환경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 특히, 상습위반자에 대해서 허가취소 및 체형을 원칙으로 하는등 벌칙을 상향조정
- ☐ 불법 또는 편법으로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공장 등은 관계기관이 합동조사하여 조속 원상 복구시키고 위반행위자의 처벌과 함께 해당 공직자도 엄중 문책하는 방안 강구(환경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상수원영향지역의 개발의욕 저감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내 대형건축물, 숙박업소, 음식점, 호화별장, 폐수배출업소들의 위반내역등을 공개하는 방안 검토(환경부, 법무부, 지자체)

7. 물 節約과 水質汚染 豫防을 위한 敎育

- ☐ 한강 상하류지역을 포함한 2,000만 수도권 전주민을 대상으로 물절약 및 수질오염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환경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지자체)
 - 가정, 기업체, 음식점, 숙박업소, 수원지, 초·중·고생별로 지켜야 할 『물절약 및 수질오염예방수칙』을 제작·배포
 - 특히, 초등학교시절부터 물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물절약 및 수질오염예방에 관한 의식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물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 예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한강순례교육프로그램”등
- ☐ 민관 공동감시단 활동에 의한 지천별 수질오염도를 주기적으로(예 : 매2주 1회) 측정 공표하여 주민들에게 수질오염의 실상을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녹조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류예보제의 효율적 운용(환경부, 지자체, 생·공업용수취·정수기관)
- ☐ 지역별로 음식점, 숙박업소 등 오염배출업소 업종별 조합을 구성하여 자율관리를 유도하는 방안 강구(지자체, 환경부)
- ☐ 자치단체별 수질관리특별대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포상하는 방안(국무조정실, 환경부)

Ⅲ. 綜合對策樹立 推進日程

- ☐ 각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98. 6. 13(토)까지 소관 기관별대책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소관부처별 대책을 토대로 '98. 7. 18(토)까지 종합 대책(안) 마련
- ☐ 『물관리정책조정자문위원회』는 '98년 8월중순까지 종합 대책(안) 검토·조정
 - 종합대책의 주요과제별로 주관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검토
 - 주관위원 중심으로 관련부서, 환경단체, 전문가 협의 추진 및 공청회개최
- ☐ 『팔당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안)』을 물관리정책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확정 : '98. 8월말
- ☐ 사업추진실적 점검(국무조정실) : '98. 9월말부터 분기 1회, 팔당 상수원수질 1등급 달성시까지

所管別 推進課題

구 분	추진 과제	주 관 (협 조)
1	<p>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구축</p> <p><input type="checkbox"/> 계획수립대책반 구성</p> <p><input type="checkbox"/>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p> <p><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관리협의체 구성</p> <p><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물관리대책반』 구성</p>	<p>환경부(관계부처, 지자체)</p> <p>환경부(지자체)</p> <p>환경부(행정자치부, 지자체)</p> <p>지자체</p>
2	<p>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모델링에 근거한 오염저감 방안</p> <p><input type="checkbox"/> 권역별 수질관리모델 수립</p> <p><input type="checkbox"/> 공동조사반 구성</p>	<p>환경부, 지자체(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p> <p>환경부(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연구원,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p>
3	<p>상수원 오염예방을 위한 보호관리 제도의 개선</p> <p><input type="checkbox"/> 상수원 보호제도 개선과 효율화방안 강구</p> <p style="margin-left: 20px;">○ 상수원 보호제도 재검토 및 개선방안</p> <p style="margin-left: 20px;">○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규제방안</p> <p style="margin-left: 20px;">○ 준농림지역 음식점, 숙박시설 신규입지 금지 및 수계인접지역 오염업소 입지제한 강화방안</p> <p style="margin-left: 20px;">○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권한 부여</p> <p><input type="checkbox"/> 오염총량 한도설정 관리 및 하수처리장 등의 방류수 수질 및 배출허용 기준 강화</p> <p><input type="checkbox"/> 상수원보호구역내 국·공유지의 민간불하 제한 및 환경친화적 이용증대</p> <p><input type="checkbox"/> 상수원지역 오염배출업소 대장 관리방안</p> <p><input type="checkbox"/> 축산시설의 신규입지, 증설의 원칙적인 제한방안</p> <p><input type="checkbox"/> 가두리 양식장 신규입지금지 등 대책</p> <p><input type="checkbox"/> 농약·비료 사용제한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 도입방안</p>	<p>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p> <p>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지자체</p> <p>환경부, 건설교통부</p> <p>환경부(법무부, 행정자치부, 지자체)</p> <p>환경부, 지자체(농림부, 산업자원부)</p> <p>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지자체 등</p> <p>환경부(지자체)</p> <p>환경부, 농림부</p> <p>해양수산부</p> <p>농림부, 환경부</p>

구 분	추진과제	주관(협조)
4	<p>환경기초시설의 조기 확충 및 정보화 추진</p> <p><input type="checkbox"/> 2002년까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확충</p> <p><input type="checkbox"/>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재원조달방안 강구</p> <p><input type="checkbox"/>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민자유치 및 전문기관 대행관리 방안 강구</p> <p><input type="checkbox"/> 신규오염원 입지를 위한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지양하고 우수 및 오수의 분리차집 방안</p> <p><input type="checkbox"/> 부락별, 건축물별 분뇨 및 생활오수의 완전처리</p> <p><input type="checkbox"/> 수질, 수량자료 정보화·GIS화</p> <p><input type="checkbox"/> 한강수계 전체의 실시간 물관리정보센타등 설립방안</p>	<p>환경부(지자체, 행정자치부, 예산청)</p> <p>환경부, 지자체(행정자치부, 예산청)</p> <p>환경부(행정자치부, 지자체)</p> <p>환경부(행정자치부, 지자체)</p> <p>환경부(행정자치부, 지자체)</p> <p>환경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지자체</p> <p>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지자체</p>
5	<p>하천정비 및 유지용수의 확보</p> <p><input type="checkbox"/> 한강수계의 종합적인 댐관리 방안</p> <p><input type="checkbox"/> 댐주변과 하천부지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방안</p> <p><input type="checkbox"/> 팔당호 및 지천의 퇴적물 오염저감방안</p> <p><input type="checkbox"/>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의 효율화</p> <p><input type="checkbox"/> 소하천살리기 운동 전개</p>	<p>건설교통부(환경부, 산업자원부)</p> <p>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p> <p>환경부, 건설교통부, 지자체</p> <p>건설교통부, 환경부(행정자치부, 지자체)</p> <p>행정자치부, 지자체</p>
6	<p>수질오염에 대한 지도·단속 효율화</p> <p><input type="checkbox"/> 환경감시대 기능확대 개편방안</p> <p><input type="checkbox"/> 수질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권의 효율화</p> <p><input type="checkbox"/>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p> <p><input type="checkbox"/> 불법·편법 건축물 단속 처벌</p>	<p>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p> <p>환경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지자체</p> <p>환경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지자체</p>
7	<p><input type="checkbox"/> 물질약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교육</p> <p><input type="checkbox"/> 수질오염도 측정·공표</p> <p><input type="checkbox"/> 지역별 오염배출업소 업종별조합 구성 방안</p> <p><input type="checkbox"/> 추진실적 평가 및 포상방안</p>	<p>환경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지자체</p> <p>환경부, 지자체, 생·공업용수 취·정수기관</p> <p>지자체, 환경부</p> <p>국무조정실(환경부)</p>

八堂湖 등 漢江水系 上水源 5大圈域

